

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42.36 (-13.79)	729.05 (-14.01)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939 (+0.003)	1378.30 (-1.60)

## 정부에 신뢰 잃은 피해자들 “구제책은 당침지위 유지 뿐”

### 사전청약 후폭풍

#### ③ 희망고문

청약난민 양산한 정부 정책 공공청약 지연만 피해 지원 민간 특별공급 구제는 미비

사전청약제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판 지주택(지역주택조합)’이라 부른다. 주택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했다가 사업이 정제, 지연되는 것은 물론 조합파산 등으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지주택이나 사전청약이 다를 바가 없다는 조롱이다.

사전청약이라는 어설플 정책이 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2~3년을 기

다린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시 ‘청약난민’ 신세가 됐다.

공급 확대 속도전을 펼치겠다더니 정부는 본청약 지연과 취소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시행사 역시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에 묶여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은 그대로 날려버렸다.

정부가 뒤늦게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 ◆ 피해커진 민간 사전청약

본청약만을 기다리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취소나 분양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지금의 청약 시스템에서 2~3

년이란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기회다. 혼인 기간이 지나거나 소득이 높아지면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없어지기도 했고, 당초 요구된 거주기간을 채우고타지로 이사를 간 경우 다른 청약 기회도 잡을 수도 없다. 기약없이 미뤄지는 일정에 전월세 계획도 짜기 힘들다.

특히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의 피해는 더 크다. 공공분양의 경우 당첨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본청약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지원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입주 지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해당한다.

한 피해자는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민간 사전청약 취소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간 시행사와 개인 간의 계약문제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사업 취소로 LH는 토지 계약금 이득을 보고 공공택지를 회수했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뒤늦게 구제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피해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관련 규정을 바꿔 민간 사전



#### 8일부터 中 무비자 입국 가능

중국에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

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3일 오전 서울시내 한 중국여행사. /뉴스

청약 당첨자의 중복 청약을 허용하고, 사업 취소로 피해를 본 이들의 청약통장 가입 이력과 납입 횟수 등은 복구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공급 등 자격 자체를 상실한 경우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 ◆ “구제책은 당첨자 지위 유지 뿐”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사전청약 취소 단계에 대한선 당첨자 지위 승계를, 분

양가 상승 단지의 경우 인상률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파주운정3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



### 메트로경제 ‘2024 뉴테크노로지포럼’ 범용인공지능 시대, 공존법 모색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오는 11월 20일(수) 오후 “2024 뉴테크노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인공지능(AI)이 가속화하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과 공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AI를 필두로 확장현실(XR),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루는 기술들이 융합되며 초연결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거주환경과 노동주체는 물론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변화하며 미래 생태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초현실사회로 :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AGI 시대의 공존법을 모색하고 산업과 기업에 일일킬 변화상을 공유합니다.

- ◆ 주 제 : 초현실사회로 :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 ◆ 일 시 : 2024년 11월 20일 오후 2시~5시
-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르타워 페럼홀
-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 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metroseoul.co.kr)
- ◆ 문 의 : 2024 뉴테크노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기조강연 : 유성준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원장 (컴퓨터공학과 교수)
- ◆ 강 연 : 김현배 법파인 대표 이근우 화우 법무법인 시센터장(변호사)



## 한국, 이르면 연내 ‘초고령사회’ 진입

5년 새 노인비중 4.4%p 늘어 늦어도 내년 1월 20%선 도달

대한민국이 올해 안에 또는 내년 1월 중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는다. 노인 인구 비중이 20% 선에 도달하는 것이다. 유엔(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불과 0.18%포인트(p)밖에 남지 않았다.

3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총인구(5123만 명)에서 65세이상(1015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인 19.82%에 달했다. 노인 비중 14% 이상~20% 미만의 고령사회도 곧 막을 내리고 앞에 ‘초’(超)를 달게 된다. 이들 인구 비중은 1년 전인

2023년 10월 말(18.79%)과 비교해 1%p 넘게 커졌다. 올해 들어서는 1월 19.1%로 시작해 9월에는 19.7% 수준까지 왔다. 이어 한 달 만인 10월에 0.1%p가량 더 늘어났다.

오는 11월 19.9% 안팎에 이르러 12월에 20.0%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20%를 웃돌 전망이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더해, 기대수명·평균수명이 세계 최상위권(남자는 상위) 수준까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행안부의 연령대별 인구 추이는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다. 지난 2019년 10월 기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649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비중이 12.5%였다. 2024년 10월 이들은 549만 명으로, 5년 만에 100만 명 감소했고 비중은 10.7%까지 내려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유소년 비율에서 지난해 말 일본을 제치고 비공식 세계 최소에 자리했다.

같은 기간 65세이상 노인 인구(비중)는 796만 명(15.4%)에서 1015만 명(19.8%)으로 200만 명 넘게 증가했다. 유소년과 고령층 중간에 낀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각각 3739만 명(72.1%)에서 3558만 명(69.5%)으로 크게 줄었다. 유엔인구청에 따르면 전세계

초고령사회는 20여개국이다. 일본을 제외하면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등 모두 유럽 국가다. 미국도 아직 초고령사회가 아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일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요섭 연구위원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인구-노동관련 한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로의 이행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남성 50세 이후 조기 퇴직 및 여성 30대 후반 이후 경력단절 등이 주요국에 비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尹 지지율 10%대로 ‘뚝’… 갤럽 19%, 문화·엠브레인 17% /사진 뉴스
- ▲국회 677조 예산전쟁 돌입… “정부 원안 사수vs대폭 칼질”

- ▲국회 연금개혁, 2개월 동안 논의 없어… 연내 통과 사실상 무산
- ▲여가부장관 8개월째 공석… 임명 건의 없어



- ▲한미일, 미 전략폭격기 B-1B 참여 공중훈련… 북 ICBM 발사 대응 /사진 뉴스
- ▲북, 새 대남기구 ‘대적연구원’… 윤 대통령 원색 비난 “재앙”